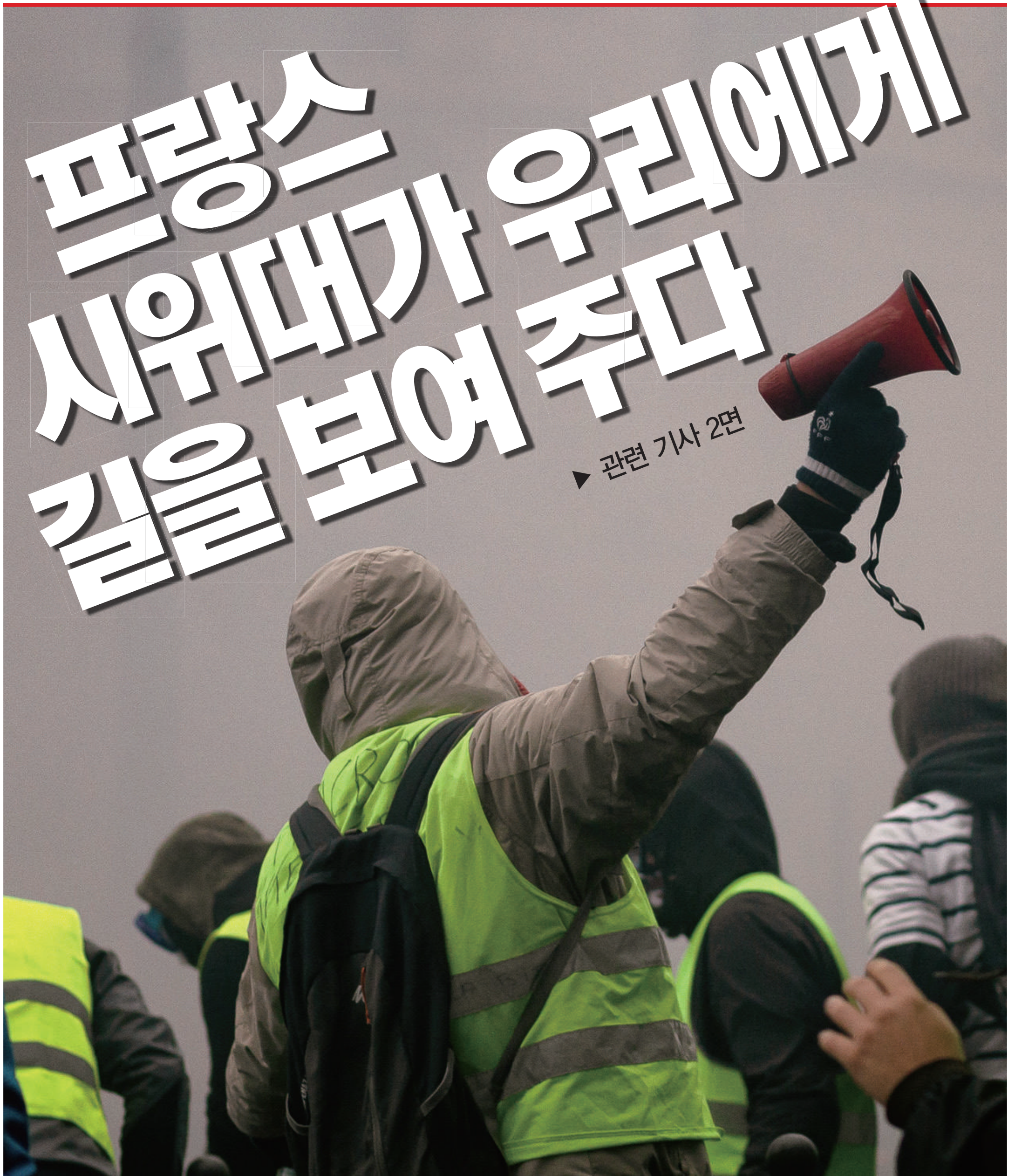


프랑스 시위대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준다

▶ 관련 기사 2면



문재인의 우경화에 맞서,
경사노위 불참뿐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

3면

김정은 연대
서울 답방할까?

4면

급진적 페미니즘과
분리적 페미니즘

6~7면

서울대 최무영 물리학 교수 인터뷰
“새만금 햇빛·풍력 발전은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8면

저임금 일자리
양산하는
광주형 일자리

12면

협력이익공유제,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10면

우파의 조국 경질 압력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

9면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

문재인의 친구를 한 발 물러서게 한 전투적 운동

현지 시각으로 12월 4일 오전,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은 수십만 명의 대중적 항의에 밀려 유류세 추가 인상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마크롱 정부에 일체감을 표현해 온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반노동 노선으로 우선 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시위대의 강경하고 격렬한 투쟁은 한국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보여 준다. 이 기사는 12월 4일 밤에 처음 보도됐는데, 그 뒤 ‘노란 조끼’ 대변인은 정부 조치가 미흡하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12월 8일에도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기사를 일부 개정했다.



문재인이 각별히 동질감을 나타낸 중도파 대통령 마크롱을 후퇴시킨 노란 조끼 시위

프랑스 전역에서 분출한 대중 시위가 12월 4일 정부를 물러서게 했다. 그러나 ‘노란 조끼’ 운동이 거대한 사회적 항의 운동으로 폭발한 지금, 정부의 양보는 너무 뒤늦고 부족한 것일 듯하다.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필리프는 유류세 추가 인상 시행을 6개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12월 1일 노란 조끼 시위대 수천 명이 파리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고 도로를 점거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후에 나왔다. 노란 조끼 시위라는 이름은 프랑스 자동차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차량에 구비해 놓아야 하는 형광 노란 조끼에서 따온 것이다.

정부 발표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SNS에 글을 남겨 유류세 인상 완전 철회, 임금 인상, 연금 개악 철회 등을 성취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의 퇴진도 바란다.

12월 1일 경찰은 노란 조끼 시위대에 최루탄·물대포·섬광탄을 쏘고, 경찰봉을 휘두르며 시위 참가자들을 대거 연행했다. 몇몇 사람들은 경찰 폭력에 대응해 상점과 은행을 파손했다.

보건 노동자 앙젤리끄는 이렇게 말했다. “경찰은 짐승들입니다. 정부는 부자들 편만 듭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해 마땅한 일을 했

습니다. 파리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죠. 그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날] 니스, 스트라스부르, 마르세유, 렌, 보르도 등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 국가는 아만적으로 대응했다. 12월 1일 [하루에만] 수십 명이 다치고 프랑스 전역에서 412명이 연행됐는데, 파리에서만 300명 이상이 연행됐다. 수백 명이 “예방구속”을 당했다.*

그러나 운동은 멈추지 않았고,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은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다.

유류세 인상에 반발해 시작된 이 운동은 이제 여러 다른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광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노란 조끼 시위에 동참했다.

대규모

12월 1일 [마크롱 정부의 교육 개악에 맞선] 학생 행동의 날이 열렸는데, 노란 조끼 시위가 벌어진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다. 학생들은 12월 3일 월요일에도 학교 100곳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중 20곳이 파리 교외의 노동자 거주 지역에 있는 학교였다.

12월 1일 높은 실업율에 항의해 조직 노동자 1만 5000명이 시위를 벌였는데, 이 노동자들은 노란 조끼 시위에도 결합했다.

파업 중인 구급차 운전 노동자들은 12월 3일 아침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집회를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들은 파리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도로 점거 투쟁을 시작했다.

파업 중인 구급차 운전 노동자 브라힘은 구급차 150대가 도로 점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브라힘은, 정부의 의료 수송 재정 감축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프랑스 전역에서 구급차 운전 노동자들이 파리로 모이고 있다고 했다. 브라힘은 이렇게 말했다. “노란 조끼도 우리와 함께해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반란을 “극좌·극우 시위꾼들” 탓으로 돌리려 애썼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의 압도 다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프랑스의 우파성향일간지 <르피가로>는 노란 조끼 시위에서 연행된 사람들이 대부분 “20~30대의 노동자, 정비공, 요리사, 목수, 농부, 배관공”이라고 시인했다.

철도 노동자 피에르는 12월 1일 동료 다섯 명과 함께 파리에 와서 시위에 참가했다.

피에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지할 만한 진짜배기 노동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파리에 왔습니다. 이 시위는 대단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올해 철도 파업에 참가했었습니다. 그 파업은 훌륭했지만, 충분치 못했어요.

“이제 [노란 조끼 시위를 보니] 마크롱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다수인 반자본주의신당(NPA)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이 운동에 연대하며 운동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좌·우파 모두 운동에 영향력을 미치려 분투하다

노란 조끼 운동의 초기부터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 운동에서 득을 보려고 애써왔다. 파시스트인 마린 르펜은 이 운동의 대변자를 자처했다. 하지만 르펜이 주장하는 분열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메시지는 대체로 거부당했다.

몇몇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이 운동의 투쟁성과 활력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훨씬 매가리 없는 운동을 뒷받침하는데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노란 조끼 운동은 그 모든 세력들로부터 대체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기성 정치와 수많은 노동계급 사람들

의 관심사 차이가 워낙 커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은 또 펼쳐질 수 있다.

[투쟁이 아닌] 선거적 방식이었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도 이와 비슷한 데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운동이 왼쪽으로 일반화할 것이냐 오른쪽으로 일반화할 것이냐이다.

프랑스 좌파들은 이런 운동의 모순과 결점을 도도한 자세로 비평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일반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운동의 능동적 일부가 돼야 한다.

혁명가가 파업을 호소하다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 연맹인 노동총동맹(CGT)은 노란 조끼 운동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다.

처음에 노동총동맹은 유류세 인상에 반발해 11월에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을 폄하했다.

이제는 “대중의 분노가 정당”하다며 “노동총동맹도 이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한다. 노동총동맹은 “공공·민간 부문 노동자, 구직자, 퇴직자, 고등학생, 대학생이 모두 모여 대규모 토론을 벌여 요구안을 논의하고 행동 계획을 함께 결정”하자고 호소했다.

노동총동맹은 “12월 14일을 전국적 대규모 행동의 날”로 정하자고 호소했다.

파업, 도로 점거, 대규모 시위를 확대하는 것이 그런 운동을 건설할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노동총동맹 지도자들은 진정한 저항을 고사시키는 일이 너무 잦았다.

12월 3일 반자본주의신당(NPA)의 지도자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근본적 사회변화를 향한 길을 닦기 위해 “수백만 명이 파업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633호

이 기사는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위커>의 편집자 찰리 김버가 쓴 글을 국역한 것이다.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가가 부적절한 이유

최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의 본격적인 친시장·반노동 선전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지율 하락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본지 11월 28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현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고 노동 개악의 수용을 압박하는 수단임이 드러나고 있다. 경사노위의 우선적 안건은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이다.

전국여성노조(이하 여성노조)는 이 점을 비판해 놓고는, 정작 나지현 위원장이 여성을 ‘대표’한다며 경사노위에 참가하고 있다.(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역임한 박봉정숙 여성단체연합(여연) 성평등연구소장은 ‘공익위원’ 몫으로 경사노위에 참가하고 있다.)

여성노조는 여연 소속 단체로, 1999년 민주노총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라며 그 바깥에서 별도로 결성된 여성 독자노조다. 학교 비정규직, 대학 청소, 가정관리사, 골프장 경비보조원(캐디) 등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해 왔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변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 놓겠다”, “취

약 계층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 채용차별 근절,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모든 노동자 모·부성권 확보, 돌봄노동 재평가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여성노조가 경사노위에서 요구할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그러나 경사노위 참여를 통해 위 과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지금 같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

의 시기에, 강력한 노동자 투쟁 없이는 사소한 개혁조차 성취하기 어렵다. 지배자들은 기존에 성취한 개혁조차 빼앗으려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

이간질

여성노조도 경사노위 출범일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판하지 않았던가.

정부는 여성노조의 경사노위 참가 ▶ 3면으로 이어짐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의 우경화에 맞서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불참으로 충분치 않다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난 호 <노동자 연대>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는 세 가지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 하나는 탄력근로제 확대의 추진 시기를 조금 미뤄 대화 모양새를 취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 책략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결코 바뀐 것이 아닌 데다, 일부 쟁점에서 템포를 늦추는 척하면서도 지난해 여름 이후 본격화한 우경화와 배신은 거침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목할 만한 사례만 꼽아도 한둘이 아니다. 첫째,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이다. 일부 공개된 잠정 합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임금 인상과 단체협상을 5년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가 “반값 임금 고정”으로 격차를 더 확대하는 일자리이자 “초법적 노동 3권 무력화 모델”이라고 규탄했다.

우경화의 지속 또는 가속

광주시와 현대차의 이 같은 잠정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노·사·민·정 대화합’ 논의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마저 반발했다. 그래서 막판에 단협 유예 기간을 (5년이 아니라)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로 바꾸었다고 한다. 하지만 거기서 거기이고, “초법적 노동 3권 무력화 모델”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둘째, 공공기관 직무급제 추진이다. 정부는 “직무가치·성과·능력”에 따른 직무성과급제를 주장해 왔고, 12월 10일에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기획재정부 후원)를 개최해 직무급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무급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임금 억제, 차별의 합리화, 노동자 이간질이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표준임금체계(정부 안)는 이미 이런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효과적으로 싸우면, 중도파의 배신으로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는 게 아닌 진정한 대안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를 잘 보여 준다.(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260호에 실린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를 참고하시오.) 지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임금억제의 한 방편이 된 임금피크제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또 다른 임금 개악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셋째, 제주 영리병원 허가 문제다. 보건의료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규탄한다. 정부는 의료 규제 완화에서도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무엇보다 경제부총리 홍남기 지명이 보여 주는 우경화 지속의 의지다. 홍남기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정책 속도가 빨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늦추고 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빨리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노동존중’과 관련된 나머지 정책들도 진척이 없거나 후퇴하는 마당

이다. 가령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법제화도 올해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껌껌 무소식이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커녕 노동권 제한 일자리 협약을 추진하는 판국이다. 홍남기의 주장인즉, 이 추세를 가속시키겠다는 것이다.

독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구멍

현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의 추진 시기를 조금 미룬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민주노총은 12월 1일 민중대회 이후 이렇다 할 투쟁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앞서 구체적 사례가 열거된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노동 개악 추진이 굽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라도 들어오라는 문재인과 경사노위의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불충분하다.

첫째, 경사노위 산하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밝

히지 않아 산하 노조가 각개 대응할 우려가 있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각종 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도 마찬가지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경사노위 산하위원회 준비회의에 계속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일부 노조가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준비회의)에 참여하면서, 정부와 경사노위 측의 참여 권고에 응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의 대응에 균열을 낼 수 있다. 처음에는 한 개 노조만 참여하지만, 노조 간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 이내 다른 노조도 위원회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또, 다른 노조들은 하는데 우리 노조만 관련 쟁점(가령 연금이나 사회안전망)에서 ‘뒤처지는’ 노조가 될 수 없다며 더 많은 노조들이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결국 작은 구멍이 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난 호 이 신문 사설이 언급한 정부의 민주노총 ‘분열시켜 악화시키기’ 책략이다. 정부는 이

를 통해 민주노총 내 좌파의 입지를 좁히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길을 넓히려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산하 노조들이 각개 대응하다 독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지 말고 경사노위 산하위원회 불참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해야 한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패턴 경계해야

둘째, 단지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참가 권고 불응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투쟁을 해야 한다. 개악을 전제로 타협과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옳지만, 그 대안은 바깥에서 뒷집지고 대화 구경하기가 아니다.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투쟁을 해서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경사노위 바깥에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를 동원한 개악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 개혁주의자들은 ‘거 봐라,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으니 개악을 완화하지도 못하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다.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고무하지 않고 회피한 다음, 투쟁 역량이 없거나 투쟁해 봤자 소용없다 하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기우는 식의 패턴은 이제 익숙하다.

유류세 인상에 맞서 단호하게 싸운 프랑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마크롱을 후퇴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독 동질감을 나타냈던 중도파 마크롱의 후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의 후퇴와 배신으로 우파가 기세등등해지고 있지만 중도파의 위기가 날을 수 있는 길이 그뿐인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효과적으로 싸우면 문재인을 한 발 물러서게 만들고 진정한 대안이 전진할 수 있다.

2018년 12월 5일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 대표집필

▶ 2면에서 이어짐

를 이용해 노동자 이간질을 시도할 수도 있다.

문재인은 민주노총이 빠진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대화 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갖췄다”고 했다. 불참한 민주노총과 참여한 ‘소외된 분야의 대표’를 대비시킨 것이다. 이간 의도가 엿보인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잘 조직된 남성·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시장 내 격차의 주

범인 양 취급하며 경사노위를 이들의 양보를 압박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이런 점들을 볼 때, 경사노위가 노동자들의 전반적 조건을 악화시킬 개악을 다루면서, 그 대신 일부 “취약 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미미한 개선을 약속해 전반적인 개악을 정당화할 우려마저 있다.

그런데 여성노조는 민주노총을 ‘대공장 남성 정규직 중심적 노조’로 보고 여성 노동자들과 남성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서로 무관한 것인 양 여기는 경향이 있어 왔다. 또한

일부 쟁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 간부들은 문재인에 친화적인 여연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해관계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근본에서 결코 상충하지 않는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여성 노동자들의 해고나 조건 악화를 민주노총의 ‘가부장성’, 또는 남성 노동자들의 ‘특권’에서 비롯한 것처럼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국가와 기업

주들이 자행한 구조조정으로 여성과 남성 노동자 모두 고통받았다.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는 경제 위기 속에서 지배계급의 강화된 공세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불충분한 대응 때문이었다. 노조 지도자들은 기층의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않고 불필요하거나 배신적 타협을 하곤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건 개악도 남녀 불문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하향평준화 시킬 것이다. 이미 최저임금법 개악, 엉망이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별 임금격차

해소 대책 부재 등이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남성·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노동자들의 양보는 자본가들의 배를 불릴 뿐,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 바닥을 향한 경쟁만 심화할 뿐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불만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노동계급 여성들의 조건을 개선하려면 경사노위 참가가 아니라 그 밖에서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동참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최미진

김정은 곧 서울 답방할까?

김영익

영화 <공작>을 보면, 안기부(현 국정원)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우파인 한나라당 이회창의 당선을 위해 북한에 무력 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대가로 거액의 달러를 북한에 준다고 한다. 이것은 실화다.

<공작>은 이 요청을 두고 북한 관료들이 격하게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그린다. 시장의 도입과 관련된 관료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엇갈렸던 것이다.

지금도 북한 권력층 내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듯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놓고 말이다. 9월에 김 위원장이 답방을 약속했을 때 이미 그의 참모 다수가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면, 그는 우파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 권력층이 보기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여러모로 정치적 부담이 큰 선택이다.

게다가 서울 답방으로 북한이 무엇을 얻을지가 불확실하다. 최근의 북·미 협상 상황을 보면, 북한이 이미 한 차례 취소한 답방을 감행할지 고심할 만하다.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물론 문재인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성사시키려고 애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1~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다. 12월 3일 판문점에서 북·미 접촉도 있어, 양측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가장 원하는 제재 완화(해제)에 대해 미국이 근본에서 태도

를 바꿀 것 같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독자 대북 제재를 9번 단행했다(10월 기준). 그리고 11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제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2차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면서도 제재는 꾸준히 강화하자,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전략적 인내'는 제재를 가하면서 북·미 대화에는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이전의 미국 대북 정책을 가리킨다.

일각에는 미국이 내년 봄에 열릴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고,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한 조치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 그런 견해의 사람들은 이런 '양보'에 북한이 화답할 차례라고 한다.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에 관한 트럼프의 애초 약속은 축소가 아니라 중단이었다. 오히려 주목할 점은 11월에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이 진행된 데 이어 연합훈련의 재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면서 '축소'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북·미 협상에 진전이 없고 미국의 제재가 안 풀리면, 남북 관계도 그에 연동돼 더디게 풀릴 수밖에 없다.

북·미 간에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잠정 합의 도출이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정말 서울에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90일 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제국주의 간 경쟁은 계속 악화할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일으킬 정치적 파장은 작지 않겠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국제 정세가 답방 성사와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답방을 둘러싼 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가 대두하자, 우파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답방 논의를 계기로 '종북' 단체들이 공공연히 김정은을 찬양한다고 불만이다. 통일부의 새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에 연평도·천안함 사건 언급이 빠지자, 우파들은 김 위원장의 답방 길에 “명석을 깔아 주려”고 식재한 것 아니냐며 성화다.

우파들은 대북 적대감 핵심인 냉전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남북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답방에 반대한다. 이들의 수구적 고집불통을 보면 참으로 불쌍스럽다.

한편, 노동자 운동 일각에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성사에 노동운동이 역량을 집중하자는 주장이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항구적 평화)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협조하자는 것이다. 노동자 운동의 다른

현안은 그다음에 따질 일이라는 견해를 함축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애써 반대할 일은 아니다. 답방의 실현은 노동계급이 정치적 교훈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정부 당국 간 협상으로 항구적 평화 실현이 가능하지 않음을 배우는 정치적 경험 말이다.

흔히들 국가 지도자들 간 협상으로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상황이 훨씬 더 결정적인 요인이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경제적·지정학적 경쟁 체제는 심지어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강대국 지도자조차 통제할 수 없다.

하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그 자신들의 의지로)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2000년대의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당시에 참으로 획기적인 발전으로 여겨졌다. 분단의 낡은 질서와 이데올로기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낙관이 있었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오늘날, 한반도 상황이 근본에서 바뀐 게 없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

게다가 협상의 당사자인 문 대통령은 긴장 완화에 필요한 중장기적 조치들 — 군축,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 — 에는 전혀 의지가 없다. 외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데 의지를 발휘할 때가 많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게 그런 사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각각 남한과 북한에서 노동계급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체제의 최상층에 속해 있다. 그들과 남북 노동계급 사이에 근본적인 이해관계 대립이 존재한다. 비단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평화 문제를 놓고서도 그렇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친시장·반

노동 공세를 펴고 있다.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을 참가시켜 양보를 이끌어 내려고 애쓰면서 말이다.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 분노를 달랠 여러 정책을 쓰는데, 현 맥락에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그 카드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운동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남북한 화해·협력(특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성사)을 중심으로 놓으면,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공세에 맞선 투쟁은 그만큼 부차화돼 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위해 투쟁에 나설 때 자신감과 의식이 성장할 수 있다. 그래야 평화를 위한 반제국주의 운동에 노동계급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부라도) 발휘하는 게 가능해진다. 노동자 정치 조직들이 노동계급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국가 지도자들 간 대화를 수동적으로 지지하도록 애쓰기보다, 노동계급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애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미·중 무역 전쟁 '휴전'
그러나 알맹이 없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 자본주의 풍토병

★ 철도공사-SR 통합 약속
어기는 문재인 정부

★ 조지 H W 부시라는
악마가 죽다

★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북한은 안 되고
남한은 되고?

국방비 증액, 한미연합사 유지, MD(미사일방어체계) 수입

“평화의 터전”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니

김영익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모두에서 남북은 “단계적 군축”을 약속했다. 그리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한미동맹은 재조정(또는 해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천은 그런 방향과는 명백히 엇갈린다. 우선, 2019년 국방예산을 11년 만에 최대치로 늘리려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비약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국방 예산안을 보면, ‘한국형 3축 체계’ 같은 공격적 군사 계획을 그대로 계승했고 이를 위해 막대한 첨단 무기 구입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그중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미국 MD와의 통합 운영을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애당초 미군 MD 자산 없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미국 MD 자산인 SM-3 미사일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이 도입돼 한국 이지스함에 배치되면, 유사시 한국군은 주일미군 기지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해 주게 된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은 신형 SM-3 미사일을 공동 개발 중이다. SM-3 미사일 도입은 향후 한·일 군사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MD를 고리로 미·일 동맹을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국방부 제공 미 해군 사진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SM-3 미사일

여기에 한국을 동참시키려고 애썼고, 한국도 그 협력 수준을 높여 왔다. 최근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가 그 흐름에 상당히 타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포괄적 동맹

한·미 간의 해묵은 쟁점인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제 나라 정부가 오롯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굴욕으로 받아들이나.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작전통제권 환수는 요원해 보인다. 북한에 대한 압도적 전력 구축과 운용 능력을

갖춘다는 조건 하에 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사 환수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한계는 명백하다. 10월 31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의 합동군사기구를 어떤 형태로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돌려줘서 ‘대북 억제력’이라는 부담을 덜고자 하는 동시에, 한국이 전력을 강화하고 동맹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의 패

권 전략을 뒷받침하라고 요구해 왔다.

한·미 당국이 이번 SCM에서 “포괄적인 동맹의 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기로 한 것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할 전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11월 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논평).

이처럼 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동맹 강화와 맥을 같이한다면, 한반도 불안정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 군비 경쟁과 세계적·지역적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한편, SCM은 “공동의 우주작전능

력을 향상”시키기로 약속했다. 이것은 트럼프가 중국·러시아 등을 겨냥해 우주군을 창설키로 한 것과 맞물리는, 우려스러운 결정이다. 특히,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이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 1호 재진입시 정보 공유를 효과적으로 한 것이 높이 평가된 점은 시사적이다.

국방예산 증액, MD 무기 수입, 한미(일) 협력 강화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언과 상충한다. 노동자 운동이 평화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독립적이어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다.

이란 제재 동참은 한반도 평화에도 해로운 선택

이란 핵협정을 쓰레기통에 처박기로 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결정은 중동을 비롯한 국제 정세에 큰 파급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해 이란 경제의 숨통을 죄기 시작했다. 11월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트럼프 정부의 “최대의 압박” 때문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듯이 이란도 이와 비슷한 압력 앞에서는 협상 말고는 다른 선택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포린 어페어스》 11~12월 호 기고문).

대이란 봉쇄는 트럼프 정부의 제국주의적 중동 정책에서 핵심이다. 트럼프는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에서 위세가 커진 이란을 제압하는 것이 미국의 중동 패권 유지를 위해 사활적이라고 여긴다. 이를 위해 강공책을 펴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이란 핵협정 파기와 제재 강화는 중동 정세를 더 혼돈에 빠뜨리고, 이란을 비롯한 중동 민중에게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제재 강화는 한국 정부와 주요 수출 기업들에게 곤혹스

런 일이다. 지난해 한국 전체 석유 수입량의 13퍼센트가 이란산이었다. 이란산 석유 수입분 73퍼센트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중요한 원료인 초경질유(콘덴세이트)다. 석유 외에도, 한국에게 이란은 꽤 중요한 중동 교역 파트너다.

11월 5일 트럼프 정부는 2차 대이란 제재 복원 조치를 단행했다. 이란산 석유와 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지,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제재 조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제재 조치의 “예외”로 인정받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을 한시적 제재 예외 국가로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제재 “예외”로 인정받은 것은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미국이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한 덕분이라고 했다.

최대의 유연성?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다른 이유에서 8개국을 한시적 제재 예외로 인정한 것 같다. 트럼프 정부는 대이란 제재를 감행하는 한편, 이로 말미암은 국

제 유가의 폭등 가능성도 염두에 뒀아 했다. 그것이 미국 보수 유권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 4일 미국 주간지 《타임》도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전략은 이란을 매우 혹독하게 제재해서 이란으로 하여금 핵 개발 야망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협상에 나오도록, 미국이 중동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부르는 것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몇몇 나라는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 줌으로써 국제 유가가 폭등하지 않도록, 특히 미국 선거철에 그러지 않도록 하려고 애쓴다.”

이것이 중국·인도·일본·한국처럼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8개국”에 포함된 이유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한테 “예외” 조치를 받아냈지만, 공짜는 아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이 예외 조치의 전제 조건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수준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6개월마다 예외 인정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이란 핵합의 이전에 견줘 한국이 대이란 제재 협조 수위를 명백히 높인 것이다.

또한 예외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전·건설 등 여러 부문의 대이란 교역에 차질을 빚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한국과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려고 물물교환 방식을 궁여지책으로 검토하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중동 정세 변화 등에 따라, 한국 등에 대한 예외 조치는 진짜 “한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권력자들에게 중동 패권은 단기적 유가 인상이나 지지율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최근의 무역 전쟁에서 보듯 한국, 유럽 등 동맹국 자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그보다도 부차적인 문제다.

이란 제재 문제는 한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재 협조 압력에 문재인 정부가 타협한 점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얽히고설켜 있음을 반영한다.

불량 정권

트럼프의 대이란 제재와 한국의 타협은 북한에게 나름의 교훈을 줄 수 있다. 미국 권력층, 특히 공화당 우익이 이란·북한 등을 “불량 정권(국가)”로 한데 묶어서 두들겨 왔기 때문이다. 공식 이데올로기나 정권의 기원 등에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데도 말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며 북한과의 새로운 핵 합의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폼페이오도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한과의 새 합의는 이란 핵협정보다 비핵화 수준과 검증 기준 면에서 훨씬 더 강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도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들이밀 공산이 큰 것이다.

북한 권력층은 이란의 경험을 눈여겨 볼 것이다. 미국과의 거래는 언제든 파기될 수 있고 제재가 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점 말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타협은 중동 평화에도, 한반도 평화에도 나쁜 선택이다.

김영익



불법촬영 근절을 촉구하는 '불편한 용기'

급진적 페미니즘과 분리적 페미니즘, 어떻게 볼 것인가?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우리 나라의 진보적 여성 운동은 거의 다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왔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기존 사회가 위계적으로 조직돼 있고 그 위계 체제가 여성 차별적이고 남성 본위라고 본다.

‘급진적’(래디컬)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보고 사회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노동자 연대〉신문 지지자들 같은 혁명적 반자본주의자들이 보기에 장하준은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이지만 분명 그의 이론은 급진적이다.(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책을 읽어 보지 않았음에 틀림 없다.)

녹색당의 현실 정치는 좌파적 개혁주의이지만 그들의 더 일반적인 이데올로기는 매우 급진적이다(가령 사회생산력의 증대 자체에 이익을 제기하는 것).

또한 알바노조와 알바연대가 지지한 가이 스탠딩도 정치적으로는 영국 노동당 지지자이지만 그의 이론은 급진적이다(넓은 의미에서 자율주의의 일종).

마찬가지로, 래디컬 페미니즘이 기존 사회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위계적 체제로 조직돼 있다고 보는 것은 급진적이다.

물론 이런 근본적 관점으로 사회를 보면서조차 자본주의를 개혁하겠다는 지도적·중견 활동가들이 여성 운동의 본류를 이끌고 있다.(오래 끄는 경기침

체 상황에서는 공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단순한 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일면적 평가다.

2년 반 전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계기로 여성 운동 거구의 전체가 후원하거나 조직한 각종 집회와 토론회 등이 열렸다. 그 행사들은 급진적 페미니즘을 고취시키고 홍보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남성이어서 죄송합니다’ 하며 지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물론 여성 운동의 간부들은 자유주의적 개혁과 정치인들과 정치적으로 가까이 지내 왔다. 가령 한국여성단체 연합(여연)과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지도자들의 정치는 민중당 개혁과 국회의원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페미니즘 사상은 여전히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젊은 지지자들보다는 덜 급진적일지라도 말이다.

요컨대 급진적 페미니즘의 정치는 개혁주의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급진적 개혁주의**에 대해 말할 수 있다.(물론 큰 줄거리에서 급진적이라는 것이지, 개별 이슈들에서는 그다지 급진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기존 사회의 진보적인 일대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는 그들의 운동에 대해 지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비록 그들이 조직노동계급 운동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을 극도로 경계할지라도 그들이 기존 사회의 큰 변화를 염원한다는 사실을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방법

그러나 급진적 페미니즘은 사회 체제의 본질적 특징을 생산과 **노동**과 **착취**라는 면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가부장제’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가부장제’라는 말은 요즘에는 훨씬 덜 사용되고 그 대신에 ‘여성혐오’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아무튼 가부장제를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체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자본주의를 임금노동의 착취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관계와 생산력이라는 면에서 보지 않고, 남성이 지배하는 여성차별적·남성분위적 체제로 본다는 것은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다. 급진적 페미니즘의 방법은 본질적으로 **관념론적**이고 **비(非)역사적**이다.

그래서 급진적 페미니즘은 특히 문화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을 설파하는 책들은 넘쳐나고 그 사상은 수많은 대중매체에 알려졌어도 그 사상을 위해 **대중 행동**을 하는 일은 훨씬 적은 경향이 있다.(이 점에서 기존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에 비해 ‘불편한 용기’ 측의 성취가 돋보인다.)

급진적 페미니즘의 문화주의와 달리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급진적이므로 사회주의자는 그들의 운동에 대해 지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비록 그들이 조직노동계급 운동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을 극도로 경계할지라도 그들이 기존 사회의 큰 변화를 염원한다는 사실을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달리, 노동조합이 남성 지배적이지 않고 여성들도 다양한 노동계급의 노동조합들에 가입하고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

남성은 기득권자?

급진적 페미니즘의 결합 있는 관점을 반영하는 사례를 하나 들겠다. 이다 헤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말도 페미니스트라는 말도 ‘패션’이나 ‘유행’이라고 부르기에 생업의 안위를 걸고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그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사례를 드는데, 이런 것들이다.

(1) 아이리이라는 연예인이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고 말한 것을 갖고 일부 팬들이 광분한 일.

(2) 수지라는 가수 겸 배우가 유튜브 양예원 씨의 성폭력 피해 수사 촉구 국민청원 글에 동의했다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수지 사형 청원이 시작된 일.

그러나 이런 일들은 대다수 남성들이 자행하는 일들이 아니다. 자본주의적 소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손쉬운 통제 대상을 여성이나 다른 천대받는 사람들에게서 찾는 소수 남성들의 짜질한 행동일 뿐이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이런 짜질이들과 싸잡아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을 모두 보수 편정쟁이로 몰아 세움으로써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의 중도 입장을 정당화하는 경향

이 있다.

보통의 남성들을 여성 비하적 짜질이들과 한통속으로 취급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모욕감을 줄 수밖에 없다. 남녀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이 중심이 된 광범하고 좌파적인 대중 운동이 구축되지 못하면, 급진적 페미니즘에 대한 ‘백색시’(반발)가 결국에는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다헤 작가는 또한 페미니즘 강의나 토론행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하나를 소개했다. “남편, 남성 동료, 남자친구, 아들이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행동과 말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좋은 책은 뭐가 있을까요?” 이어 그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내 답은 다소 회의적이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회색빛 받아들이 수 있는 모범 답안이 있다면, 애초에 차별이 없었음 것이다.”

남편, 남성 동료, 남자친구, 아들더러 기득권자라고? 참으로 급진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누군가가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기득권을 가졌다고 보는 건 비약이다.

내향성

급진적 페미니즘은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지당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육아, 보육, 연애, 섹스 등에 자본주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의 소의 효과와 경제 위기 상황으로 소위 프라이버시의 모든 측면들과 양상들이 크고 작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7월 30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 파업 집회

없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하고 주체 조사를 바뀐, 개인적인 것에 강조를 두어 말해 보라. 그러면 그것은 여성 차별의 문제들을 개별 남성들의 책임으로 보라는 속구인 것이다.

실제로 급진적 페미니즘은 특히 1968년 반란이 패배한 1975년 이후 급속히 이런 경향을 드러냈다. 열 일 제쳐두고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배타적이다시피 한 강조가 놓이게 된 건 자연스런 결과였다. 물론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한결같이 반대한다. 특히, 가정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급진적 페미니즘이 동일임금 문제나 보육 문제, 그 밖의 다른 여성노동자 조건 문제들에 실천상 그다지 열심이지 않은 것은 중간계급 지향성과 개인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사상은 또한 라이프스타일 바꾸기 운동으로 나타났다. 요즘의 “탈코르셋” 운동은 1968년 운동 패배 후 급진적 페미니즘의 일부가 실천한 라이프스타일 바꾸기 운동의 축소판이다. 라이프스타일 바꾸기 운동은 여성들이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덜 갖게 만들었다. 대신에 자기성찰이라는 미명 하에 자기와 무관한 일에 관심을 최대한 줄이고 자아 또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 훨씬 큰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점점 더 내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이 돼 갔다.

이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제한적·형식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이 페미니즘 지지자(가령 강준만 같은 ‘프로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열위(劣位)를 감수하는 한은 말이다.

하지만 분리주의자들은 그조차 싫다며 맹렬하게 거부한다. 가령 ‘비엘브’와 ‘불편한 용기’의 조직자들은 남성 참가를 단호하게 배격한다. 반면 모두를

분리적 페미니즘

앞서 이다헤 작가가 “남편, 남성 동료, 남자친구, 아들”을 기득권자로 지칭한 사례를 들었다. 일반으로 말해, 어



문재인 —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함

떤 페미니스트가 남편, 남성 동료, 남자친구, 아들이 기득권을 가졌다고 봐도 이들을 적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단순한 급진적 페미니스트일 뿐이다. 그러나 그가 남성을 적대한다면 그는 분리적 페미니스트이다.(남성을 기득권자로 보는데도 어떻게 분리적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지만, 현실의 압력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는 물론 다른 분야의 급진주의자도 덜 일관되게 만든다.)

급진적 페미니즘을 급진적 방향으로 가장 극단까지 밀고 나간 것이 바로 분리적 페미니즘이다. ‘분리주의’라는 말은 남성과의 그 어떤 접촉도 극력 기피한다는 뜻이다.

급진적 페미니즘과 분리적 페미니즘을 동일시해선 안 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는 둘이 서로 구별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융합돼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2014년 영국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자신이 “급진적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응답자의 18.5퍼센트였고, “분리적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1.2퍼센트밖에 안 되었다. 이 현상은 이제 돌을 돌일시킬 수 없음을 뜻한다.

이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제한적·형식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이 페미니즘 지지자(가령 강준만 같은 ‘프로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열위(劣位)를 감수하는 한은 말이다.

그러나 성차 결정론의 주장대로 여성에게 타고난 모성이 있다면, 대대체 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가?(물론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가운데는 모성 관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령 한때 급진적 페미니스트였던 엘리자베트 바랑테르, 〈만들어진 모성〉, 2009. 이 책의 원서는 1980년에 쓰여졌다.)

《젠더, 만들어진 성》(휴먼사이언스, 2014)의 지은이 코델리아 파인은 성차 결정론이 사이비 과학이고 그것도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이비 과학임을 보여 준다. 특히, 남녀 행동의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만약 성별 차이가 생물학적 성차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성평등을 위한 투쟁은 ‘해 빠진’일 것이다. 그러므로 성차 결정론을 믿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성평등에 거스르는 사상을 바탕으로 성평등 운동을 하는 모순을 품고 있는 것이다.

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페) 조직자이나 11월 28일 열 〈경향신문〉에 보도된 ‘모닥불’은 남성의 참가를 허용한다.(그렇다고 해서 모낙페 조직자들의 정치가 진정으로 개방적인 것은 아니다. 그들도 운동의 집행 수준에서는 페미니스트들만이 참여하도록 하고,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배제해 왔다.)

앞서 남성을 기득권자로 보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 남성이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남성이 여성 차별을 득을 본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특권 이론**이라고 한다. 페미니스트 하이다 하트만은 선구적으로 1970년대 말에 특권 이론을 주장했다.

급진적 페미니즘과 분리적 페미니즘을 동일시해선 안 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는 둘이 서로 구별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융합돼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2014년 영국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자신이 “급진적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응답자의 18.5퍼센트였고, “분리적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1.2퍼센트밖에 안 되었다. 이 현상은 이제 돌을 돌일시킬 수 없음을 뜻한다.

이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제한적·형식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이 페미니즘 지지자(가령 강준만 같은 ‘프로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열위(劣位)를 감수하는 한은 말이다.

그러나 성차 결정론의 주장대로 여성에게 타고난 모성이 있다면, 대대체 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가?(물론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가운데는 모성 관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령 한때 급진적 페미니스트였던 엘리자베트 바랑테르, 〈만들어진 모성〉, 2009. 이 책의 원서는 1980년에 쓰여졌다.)

《젠더, 만들어진 성》(휴먼사이언스, 2014)의 지은이 코델리아 파인은 성차 결정론이 사이비 과학이고 그것도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이비 과학임을 보여 준다. 특히, 남녀 행동의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만약 성별 차이가 생물학적 성차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성평등을 위한 투쟁은 ‘해 빠진’일 것이다. 그러므로 성차 결정론을 믿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성평등에 거스르는 사상을 바탕으로 성평등 운동을 하는 모순을 품고 있는 것이다.

여성 운동은 훨씬 급진적, 그러나 유물론적이 돼야 한다. 20세기 초 국제 여성의 날이 결정되던 때 수준의 투쟁성(반자본주의적 급진성)과 물질성(유물론)으로 돌아가야 한다.

맺음말

분리적 페미니스트의 대표 사례는 ‘불편한 용기’ 조직자들이다. 그들은 “운동권”을 “관중”이라며 배제하는데, 특히 기존 여성단체 간부들을 겨냥한 방침이다. 만일 그들이 독자적으로 동맹을 규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그저 기존 여성단체들의 주도권 아래서 불법촬영 근절운동을 건설했다면, ‘불편한 용기’ 시위만큼 커다랗고 효과적인 운동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식의 지도를 받으며 조직됐다면, 급진성과 투쟁성, 활력이 떨어져 맥없고 청원 식인 훨씬 소규모 집회로 열렸을 것이다.

‘불편한 용기’ 조직자들의 ‘운동권’ 배제는 그들이 우파여서가 아니라 정치를 배제하는 아니키즘 때문이다. ‘불편한 용기’의 카페 공지사항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는 위마드, 운동권 및 그 어떤 단체와도 무관한 익명의 여성 개인의 모임입니다.” 또, 이렇게 말한 것도 눈에 띈다. “운동권 단체 분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여성들을 농락하지 말아 주세요.”

요컨대 각자의 삶을 살며 흠어져 있는 개인(여성)들이 단일한 목표(불법촬영 근절)를 위해 잠시 결집한 것일 뿐. 정치와는 관계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바쿠닌 파를 비판하며 아니키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치를 피하려고 설교하는 사람치고 부르주아 정치에 다시 빠지지 않는 사례가 없다는 걸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

영겔스도 마르크스의 아니키즘 비판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정치를 삼가는 건 사실 정치를 자유주의적 정치인이나 개혁주의적 정치인에게 맡기는 셈이다.”

실제로 ‘불편한 용기’는 그 급진성에 도 불구하고 정변해 전 여가부 장관 같은 것은 개혁주의 정치인에게 우호적이다.

그러나 페미니즘 운동 내의 분리적 경향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일반적으로 급진적 경향 자체가 결국 개혁주의 또는 자유주의 정치의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제 여성 운동이 분열돼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운동들로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다원주의가 유력하면 사람들은 상대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으로 기존의 커다란 실세에 기대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그 실세는 혁명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자유주의 정당이나 개혁주의 정당일 것이다.

둘째, 여성 운동의 분열에 반대로, 여성이 모두 공통점이 있다고 계속 강조해 여성 연대가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도, 실제로는 신기루일 뿐이다. 물론 여성은 모두 차별받는다. 그러나 차별받는 방식과 정도는 계급에 따라 크게 다르다. 지배계급이나 상층 중간계급 여성들은 차별을 크게 완화시키거나 달리 해소하거나 전가시킬 수 있다. 낙태 문제나 육아 문제를 생각해 보라. 이런저 맥없고 청원 식인 훨씬 소규모 집회로 열렸을 것이다.

셋째, 여성 차별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분리주의나 급진주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차별의 원인은 가부장제나 여성혐오가 아니다. **노동력 재생산**이 원인이다. 노동력 재생산 때문에 가족도 존속하는 것이다. 노동력 재생산은 자본주의 **생산**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여성 차별을 끝낼 수 없다.

여성 운동이 이 핵심적 문제를 계속 회피하려 한다면 여성 해방의 전망 자체를 회피하는 셈이다. 현재 여성 운동이 내다보는 전망은 체계적 천대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천대의 ‘완화’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타도와 전복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친여성적’ 개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노동력 재생산의 필요성 때문에 여성을 (기존 가족제도 안팎에서)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일들에 종속시킨다. 그래서 오래 가는 경제 불황 속에서는 여성 차별의 일반적 완화도 언급생성이 된다. 친여성적 개혁도 미흡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 운동은 훨씬 급진적, 그러나 유물론적이 돼야 한다. 문제인 정부와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거의 자유주의적인 지도자들로해 해방을 향한 전망은 어렵다 없다. 20세기 초 국제 여성의 날이 결정되던 때 수준의 투쟁성(반자본주의적 급진성)과 물질성(유물론)으로 돌아가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건설 논란

“원상복구 아니라면, 햇빛 발전은 차선책 될 수도”

문재인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발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보수 언론과 우파는 재생에너지가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핵발전을 재개하라고 요구한다. 한편, 새만금이 있는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무계획성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오히려 환경과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할까 봐 걱정한다. 오래전부터 핵발전의 문제를 지적하고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해 온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최무영 교수(사진)를 인터뷰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발전은 여러 문제를 떠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벼락을 두 번 맞을 확률보다 낮다거나 100만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에요. 사실 이거야말로 괴담이라고 할 만 하죠.

첫째, 사고 ‘확률’이 100만분의 1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확률을 정의한다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확률의 간단한 정의로서 가능한 경우의 수 중에서 주어진 경우가 몇 번 발생했는지 따지는 방법이 있죠. 주사위를 600번 던져서 1이 대략 100번 쯤 나오면 그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핵발전소에 대형 사고가 날 확률을 같은 방식으로 따져볼까요? 지금 전 세계에 핵발전소가 400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형 사고가 네 번 일어났습니다. 영국 셀라필드, 미국 스리마일,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까지요. 따라서 단순 계산하면 1백분의 1은 되는 것 아니가요? 아직 400개 핵발전소가 문을 모두 닫은 건 아니니 수명이 끝나서 폐쇄할 때까지 생각하면 확률은 더 커질 수 있죠.

둘째, 핵발전소가 화력발전소나 다른 시설들에 비해 사고율이 더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전 설비를 강화한다고 해도 단언컨대 사고 가능성을 0으로 낮출 수는 없어요. 이는 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핵반응로는 내부에서 매우 강한 방사선을 내보냅니다. 그걸 둘러싸고 있는 강철과 콘크리트가 쉬지 않고 방사선에 두들겨 맞는 셈이죠. 다른 설비보다 더 잘 견디도록 설계하기는 하지만 피로도가 쌓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600여 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경미한 사고였지만 두세 번 정도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구요. 심지어 설계대로 건설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죠. 중요한 점은 아무리 잘 지어도 사고율이 0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발전소는 사고가 나면 끝이라는 점이 다른 사고와 다릅니다. 근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국토 전체가 오염되고



새만금 간척지 굵은 테두리로 둘러싸인 지역이 이번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사업 대상지다. 개발 조감도에 표시한 것으로 실제 지형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셋째, 비용이 적게 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핵발전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적절한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혀 계산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30~40년이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막대한 폐쇄 비용도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안전시설 비용이나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므로 이를 생각하면 싸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죠.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에서도 장점이 없어요. 어차피 우라늄도 매장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추정 매장량이 꽤 되지만 석유를 핵발전으로 완전히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100년도 못 갈 겁니다.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방법(증식로)도 자주 거론되는데요. 프랑스의 슈퍼피닉스와 일본의 몬주카 이를 시도한 경우죠. 그런데 둘 다 결국 문을 닫았어요. 몬주의 경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한 번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어요. 핵발전소는 냉각이 아주 중요한

데 증식로에서는 감속 문제로 물을 쓸 수 없어서 나트륨을 냉각제로 쓰거든요. 그런데 나트륨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폭발해요.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도 나트륨이 폭발해서 학생 세 명이 아깝게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지요. 따라서 증식로는 현재로서는 실용성이 없어요. 토륨을 이용한 증식로도 있지만, 이것도 경제성과 감속재, 연료가 공, 재처리 등 기술적 문제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지 불확실해요.

햇빛발전의 경우 핵발전이나 화력발전보다 그동안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면 비용은 더 낮아지겠죠. 자동차도 한두 대만 만드는 것에 비해 대량생산을 하면 비용이 많이 싸지잖아요. 그래도 이미 햇빛발전의 효율이 20퍼센트 가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발전 단가가 햇빛이 110, 바람이 90인데 반해서 핵발전은 150으로 더 비싸고, 심지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대로 고려하면 100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이 정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핵발전에 신규 투자는 햇빛과 바람에 비해 100분의 1 이하지요. 돈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정신에 문제가 없다면 핵발전을 계속하자는 건 말이 안 돼요. 어쨌든 전력은 필요한데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게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대규모 햇빛발전과 풍력 발전을 꼭 새만금에 지어야 하는가를 따져봐야 하겠네요. 먼저 새만금 간척 사업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농경지를 만든다고 바다를 메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나라는 농업이 무너지면서 이미 휴경지가 넘쳐날 정도로 농지가 남아도는 상

황인데 왜 대규모 환경 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사업을 시작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새만금을 공업·산업 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나라 산업이 부지를 못 구해서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 수 없는 데 이제는 비용 등 여러 문제로 원상대로 복구하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현 상황에서 일단 꼭 필요한 조처는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먼저 바닷물이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경강과 동진강이 새만금으로 흘러 든다고 알고 있는데 이 강들은 호남 평야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원이거든요. 그런데 강물이 정체돼 오염이 퍼지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물의 흐름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복원도 하는 등 중요한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에서 새만금을 원상복구할 수 없다면, 햇빛발전 등은 차선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이미 메워진 간척지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과도기적으로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한 곳에 적절한 규모로

물론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면 결국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햇빛발전의 경우에도 예컨대 멸종한 산람을 파괴하고 산에 짓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도시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죠. 건물 지붕이 대표적이고 주차장이나 창문에도 할 수 있어요. 나아가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지요. 또한 호수나 강이나 바다 등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수면 위에 설치하면 수중 생물을 포함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육지보다는 적으리라 생각합

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풍력발전의 경우는 글썽요, 간척이 끝난 지역에 설치하거나 부유식 풍력을 한다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현재 간척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부유식 풍력은 고정식 해상풍력보다는 환경과 어업에 피해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전력은 생산지와 소비지를 분리하느니 필요한 곳에서 적절한 규모로 만들어서 써야 한다고 봐요. 햇빛발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죠. 문제는 산업인데요. 핵발전과 화력발전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주로 산업시설 때문이거든요. 가정용 전력 수요는 얼마 안 돼요. 전체의 15퍼센트 정도이고 나머지는 산업용인데, 이게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정용보다도 싸게 공급해주므로 절약에 대한 인식이 없는 듯해요. 이는 바뀌어야 합니다.

기후변화를 늦추려면 일단 자동차 사용을 크게 줄이고, 육식을 위한 대규모 공장식 축산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오는 메탄은 양이 적어도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높은 날이 가장 잦다고 알려진 지역의 경우에 그 이유가 대규모 축산 시설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산업용 전력, 자동차 등에서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고, 이에 따라 전력 생산도 햇빛이나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고기 소비도 줄이면 더 좋겠지요.

인터뷰·정리 장호중

우파의 조국 경질 압력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가 자초한 것

김문성

문재인 지지율이 사실상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긍정 평가가 준 것뿐 아니라 부정 평가가 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다. 정의당 지지율은 소폭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파 야당들의 지지세는 슬금슬금 오르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가 약화되면 우파 야당이 힘을 회복하니 정부를 우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이는 상황의 절반만을 보는 것이다.

하반기 내내 이어진 문재인 지지율 하락은 주로 대중의 진보 개혁 염원을 저버린 탓이기 때문이다. 지지율 하락 폭과 우파 야당 지지율 상승 폭을 비교해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올해 내내 문재인은 개혁 약속을 뒤집고, 제정한 작은 개혁 조치들을 거둬들여 왔다. 적폐 청산은 감속하다 못해 거의 멈춰 섰고 이젠 역주행할 태세다. 이우선화에 순순히 협력하지 않는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차기 대선주자 대열에서 숙청할 태세다.

우파가 시행할 만한 정책들을 시행하니, 문재인의 지지가 떨어지고 우파가 사기를 회복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요즘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불구속 재판(석방)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은 비박계인데도 친박 태극기 세력까지 통합하자고 말한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노동계급 자녀들을 불모 삼아 국가 지원금을 빼먹는 부패한 관행을 대놓고 비



조국은 민주노총 비난으로 자신이 좌파가 아님을 증명하려 했으나, 우파가 공격하기는 더 쉬워졌다.

호한다. 경제 상황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문재인에게 등을 돌리는 걸 보며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

최근에는 청와대 내 비위 건에 책임지고 민정수석 조국을 경질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때 좌파 출신이었던 조국은 자기 임무를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있다고 공언해 왔다.

별 볼 일 없는

민주적 개혁들이어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대단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개혁 제안들인데도 우파에게는 눈엣가시다. 우파는 그의 출신, 사법 개혁 어젠다 모두 못마땅할 것이다. 비록 그가 실제 좌파라기보다는 좌파의 그림자인데도 말이다.

발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의 특별감찰반 권한 남용 의혹이었다. 현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반부패비서관(고위 공직자 대상), 공직기강비서관(청와대 내부 대상), 민정비서관(대통령 친인척 대상) 아래 각각 특감반이 있다.

검찰에서 파견된 반부패 특감반 요원이 자기가 비위를 제보해 공석이 된 특정 부처 감사관 자리로 취업을 시도했다. 이 ‘셀프 취업(승진)’ 시도가 포착돼 청와대에서 제지했으나, 문제의 수사관은 다시 국토교통부의 건설 비리 경찰 수사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 역시 본인이 포착해 넘긴 사건이었다.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돼 내부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일부가 골프 접대를 받은 일이 드

러났다. 조국 민정수석은 특감반 전원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비위를 알고도 덮어 주다가 일이 커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특감반을 전원 교체한 이유가 새로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 특감반에서 이들을 조사(감찰)하려 했는데,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들이 조사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현 반부패비서관은 공안검사(!) 출신 박형철이다. 문제의 특감반원들은 그가 검찰에서 직접 데려온 수사관들이었을 테다. 박형철은 갑을오토텍의 불법·폭력 노조 탄압을 변호한 사측 대리인도 했다.

오래 전부터 민주당 정부 사람들에게 ‘반(反)부패’는 그저 타 세력의 부패만 척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구여권 대신 자신들이 새로운 특권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었던 셈이다.

11월 27일 검찰은 구 여권 경찰의 불법 민간 사찰 보고서를 찾는다며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여기서 현 청와대에 보내는 경찰 보고서도 나와 난처해졌다. 한편, 국회에서 영수증 이중 제출로 부당한 혜택을 가장 많이 취한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인 것도 폭로됐다.

이런 점들 때문에, 폭로 초기엔 우왕좌왕하던 민주당은 이제 당 차원에서 ‘조국 사수’를 외치고 있다.

그동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개혁”을 표방한 정부 아래서 우파 야당은 상징적 친정부 인물들을 표적 삼아 공격했다. 이번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관인데도 문책을 주장한다.

최근 장하성 제거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우파는 그가 엔지오 출신인 점과 소득주도성장 담론을 상징해 온 점을 못마땅하게 여긴 듯하다. 실제로 추진

하는 정책은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도 ‘장하성(개혁 학자) vs. 김동연(경제관료)’라는 허구적 프레임을 짜 경질 압박을 했었다.

표적 공세

지금 민주당은 결국 이런 표적 공세가 계속 먹히면 정권의 동력이 약화된다고 보는 듯하다. 맞는 얘기가기는 하다. 조국을 경질하면 우파의 사기는 더 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파의 공격이 왜 쉽게 먹혔는지를 봐야 한다. 지금 조국 사퇴 문제로 공식 정치가 양분되고 있지만, 진보 염원 대중 다수는 조국 지키기에 별 열의가 없다. 그가 이루고자 한 진정한 개혁이 별로 없는 데다가, 최근에는 (궤변으로) 노동 개악을 옹호했기 때문이다.

조국은 사법 농단 범죄를 조직적으로 감싸는 현 대법원을 향해 (민주노총에게 한 것처럼) ‘법원만의 국가가 아니다’, ‘몽니로 개혁 정부를 불리하게 하지 마라’고 성토했지 않았다. 아마 우파는 그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를 제거할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2년간의 수모를 만회하고 총선에서 약진하려는 우파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층을 붙잡아 놓으려고 간간히 개혁 제스처를 섞었지만) 더 우경화할 것이고 그럴수록 지지 기반은 취약해질 것이다. 친위 체제를 구축하겠지만, 그들이야말로 우선화(약순환)의 선봉장 아닌가.

청년·노동자들은 개혁 표방 중도 정부의 배신에 실망·분노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좌파가 이들을 대변해 저항을 조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파에게만 좋은 일이다.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대에게서 배울 게 많다.

민주노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김인식

12월 4일 민주노총이 ‘정치제도 개혁 촉구 현장 대표자 선언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 요구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 참여 장벽 낮추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선거 연령 하향 등이다.

이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위원장 등 정의당에 친화적인 노조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힘을 실은 것이 눈에 띈다.

이 기자회견 다음 날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정의당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호소했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전

망은 밝지 않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머지 정당들에게 국회 진입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이 속내를 드러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민주당이 갖기 어려워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두 정당은 인기가 높으면 원내 1당,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원내 2당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두 정당은 양당 체제를 선호한다.

민주노총은 이런 양당 체제가 사회개혁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대개혁 요구들은 건건이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가로막혀 있다.”

그러면서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노동자 민중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매 투쟁마다 목도한다”고 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반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와 배신에 맞선 노동자 투쟁들이 진보 정치의 시계를 돌리는 배터리가 되는 것 같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주노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를 지지한다. 해당 시기 계급 세력 균형과 대중의 정치 의식 등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선거 제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 제도는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 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현행 소선거제는 승자독식제다. 한 표라도 많이 받은 쪽이 의석을 차지한다.

그래서 현행 선거제도는 정치적 대 표성에 약점이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 제도가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사표(死票)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자, 2002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조차 전체 의석수의 일부만(국회는 300석 중 43석)을 비례대표 몫으로 할당한다.

진입 장벽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다. 예컨대, 어떤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10퍼센트를 득표하면, 전체 국회 의석의 10퍼센트를 할당받는다. 이 제도를 2016년 총선에 적용하면, 7퍼센트 정당 득표를 한 정의당의 의석수는 20석이 넘는다.

그래서 비례대표 확대는 진보 진영의 오랜 요구였다. 100퍼센트 비례대표제는 진보 정당의 국회 진출에 도움

이 된다.

또, 정당 득표 3퍼센트를 넘겨야 비례 의석 배분 자격이 주어지는 ‘봉쇄조항’도 폐지돼야 한다. 현행 300석에서 완전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0.34퍼센트만 지지 받아도 1석을 받는다(1/의석수). 그래서 노동당, 민중당, 녹색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봉쇄 조항 폐지를 요구한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은 것도 그 직전에 벌어진 노무현 탄핵 반대 대중운동 덕분에 대중의 이데올로기가 왼쪽으로 옮겨 가서였다.

1996년 12월~1997년 1월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에 맞서 대중 파업을 한 결과 중 하나로,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 덕분에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는 법적 조건을 확보했다.

협력이익공유제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강동훈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 하면서 ‘공정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은 “우리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고 비판하면서 협력이익공유제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이익을 나눠 갖는 성과 배분제도를 말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이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 편의점 자율규제 시행 등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 물론 문재인 세력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국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도 하다.

대기업들과 보수 야당은 대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인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자기들도 어렵다며 말이다. 이익 공유를 할 필요가 없는 해외 기업으로 하청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는 협박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도 2011년에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제안으로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다가, 재계의 격한 반발에 밀려 없던 일로 한 바 있다. 대기업들은 이윤을 조금치도 뺏기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일부 기업들로 ‘성과공유제’가 실행되고 있기도 하다.

2004년 포스코가 처음 도입하고 정부가 확대한 이 정책은 자율 시행이라서 참여 기업이 올해까지 대기업 91곳, 중소기업 329곳 등 얼마 안 된다. 이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득이 된다는 얘기는 나온 바 없다. 오히려 포스코는 대규모 사내 하청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산재를 방지하며,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쥐어짜는 기업이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의무화돼도 대기업은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더 낮게 계약하고, 대신 그 일부를 ‘성과공유’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누구를 위한 ‘이익 공유’인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협력이익공유제나 ‘공정 경제’는 대자본과 중소자본이 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물론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 격차도 줄여들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소득도 궁극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의 상당수도 정부의 이런 논리에 공감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6년에 ‘초과이익공유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 최근 발간한 소책자 《재벌 개혁》에서 초과이윤공유제, 성과이익공유제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낮아지면, 중소기업 노동자가 빈곤화[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중소기업주가 대기업의 수탈로부터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현실 앞에 무기력하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 중소기업들은 다른 중소기업들보다 안정적인



포스코는 ‘성과공유’를 한다며 생색을 내지만,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쥐어짜고 있다

이윤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주들도 대기업 못지않게 노동자들을 쥐어짜 왔다. 중소기업주들도 이윤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주된 근거로 삼으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연쇄 개악을 추진하는 것만 봐도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를을 알 수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려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들이 원하청 기업 모두에서 생산성 향상 노력에 협력해야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성과공유제를 대기

업 노동자 공격에 이용하고 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라는 제조업 저질 일자리 확대 계획을 강요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위해’라는 명분을 내건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 주창자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협력이익공유제를 옹호하면서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줄여 협력업체의 임금 인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안 올린다고 그 돈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달된다는 보장은 없다.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이익공유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제하고 노사협조주의를 퍼트리는 데 이용됐다. 사실 ‘재벌 개혁’이라는 요구 자체

가 다른 자본과의 연대로 나아가기 쉽다.

예를 들어, 1930년대에 프랑스 급진당도 ‘이윤 공유제’를 내걸었다. 중소 자본가들에 기반을 둔 이 정당은 격렬해지는 계급 투쟁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이 국유화와 같은 더 급진적인 대안으로 이끌리는 것을 막으려고 이를 제안했다. 문제는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이 이런 급진당과의 인민전선 정부를 유지하려고 노동자 투쟁 물결을 잠재우는 데 힘을 쓴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윤율이 낮아 장기침체에 빠진 시기에 중소 자본가들의 편을 든다고 노동자들의 처지가 개선되지 않는다.

노동계급의 대안은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 원하청 노동자 모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사측이 한 발 물러섰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김지태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통제하고 친사측 대의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노조에 개입해 온 사실이 문건으로 폭로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분지 267호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구조조정·노조탄압 저지 파업’을 보시오.)

노동자들은 11월 20~27일 4~8시간 파업을 벌였다. 그 뒤로도 30일까지 분과별 순환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지난 수년간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노조 개입을 강화했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징계와 폭력으로 억누르려고 했다.

10월에는 노조 지침인 투쟁 머리띠를 풀라고 지시한 관리자에게 항의한 대의원 6명과 조합원 1명이 무더기 징계를 당했다.

11월 29일 파업 집회에서는 사측이 경비대를 동원해, 해양분과 활동가들

의 모임인 현장실천단의 단장을 집단 구타했다. 해양실천단은 사측의 사과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 일이 벌어지기 불과 일주일 전에는 친사측 성향의 노동자가 민주와 성향의 소위원을 구타했다. 그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팀이 깨질 수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방해한 팀장을 비판했다는 게 이유였다. 사측이 노동자들을 성향에 따라 구분하고 관리해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긴 결과다.

이에 소위원 대표(분과장)들이 공동 성명을 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구시대적인 발상과 폭력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현장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사측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 팀장이 현장 통제 강화에 반발하는 노동자와 언쟁하다가 그를 향해 헬멧을 던진 사건도 있었다. 사측은 폭행 피해자인 노동자만 징계하려 한다. 이 노동자가 속한 조선2분과 노동자들은 자체

파업을 벌여 징계 시도에 항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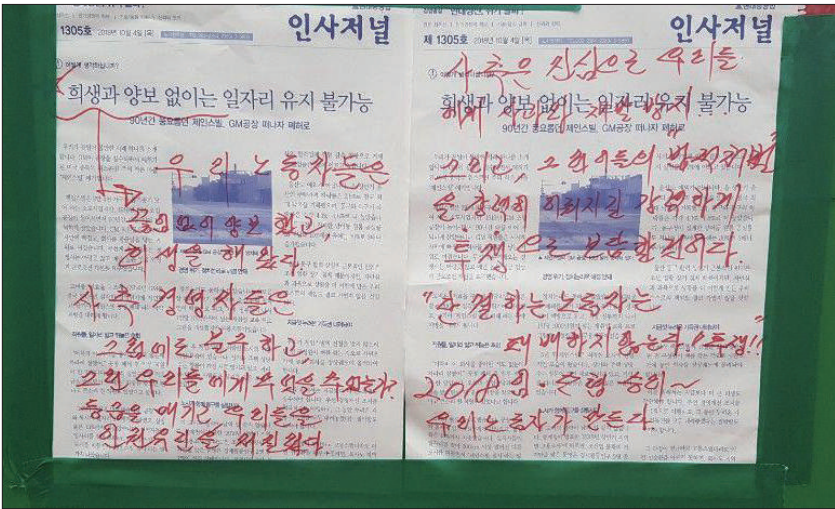
노조 개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높아 현대중공업 신임 사장 한영석은 노조 지도부를 찾아가 “정말 죄송하다”면서 “재발하면 직접 책임지겠다”고 했다. 노조 개입에 앞장섰던 노사 업무전담 조직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불씨

노조는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교섭을 진행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이 공식적인 문서로 약속한 것도 아니어서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 한 대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사장은 ‘이전 사장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장들도 처음에는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당했던 일입니다. 지금 사장은 투쟁의 불씨를 잠재우려고 하는 겁니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투쟁을 이어 갔다. 12월 4일 조선2분과 노동자들은 자체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순



사측이 불인 대자보를 노동자들이 사측 규탄 대자보로 바꿔 버렸다

회하며 집회를 열었고, 가는 곳마다 사측을 규탄하는 벽보와 스티커를 붙였다. “사찰이 웬말이냐.”

사측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고도 한다. 올해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사측이 (별도 교섭 중인) 일부 분할된 기업에서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사측은 이런 식의 이간질을 전에도 써먹은 적이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된 기업인 현대일렉트릭의 노동자들에게 지난해에는 성과급을 비교적 많이 줬었다. 하지만 올해 실적이 악화되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한 대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회사

를 찢어 놓은 건 사측이고, 노동자들을 갈라치는 것도 사측입니다. 함께 단결하지 않으면 회사 의도에 넘어 가는 겁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이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한 사례에서 보듯이, 조선업 사정은 아직 불안정하다. 현대중공업도 여전히 임금 동결과 기본급 일부 반납 등 노동자에게 양보를 종용하고 있다.

사측은 이런 공격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탄압과 이간질을 사용하고 있다. 사장의 구두 약속을 믿고 마음을 풀어서는 안 된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김인식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심하다.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가 카풀(자랑 공유) 서비스 기사를 모집하자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아직 카풀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기도 전이다. 그런데도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의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 시장을 빼앗아 갈 거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카카오T 카풀’은 일반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이 교통체계 서비스는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공유경제”의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카풀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10월 18일) 56퍼센트가 찬성했다. 반대는 28.7퍼센트였다.

카카오 카풀 운전자 모집 앱(카카오 T 카풀 크루)은 출시 하루 만에 다운로드 횟수가 10만을 넘어섰다. 최종 200만이 넘을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찬성하는 측의 근거는 이렇다.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승차 공유를 하면서 운전자는 돈을 번다. 탑승자는 ‘지옥철’이나 ‘만원 버스’를 갈아타는 고역을 피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 택시 잡는 어려움도 덜다. 택시비보다 저렴하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등등.

그러나 먼저, 카카오가 순수하게 이타심으로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카카오는 전에도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를 확보한 다음 유료화한 전력들이 있다.

‘카카오택시’가 대표 사례다. 이것은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였다. 카카오는 ‘수수료 없음’, ‘탑승자의 목적지 공개’ 등을 통해 택시업계의 호응을 얻었다. 그 덕분에 운송업계의 주도적 중계 사업자가 됐다. 이제 카풀 서비스를 실시해 전통적인 택시업계의 승객을 빼앗아가려 한다.

대리운전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카카오는 2016년 대리운전 시장에 뛰어들었다. 처음에 카카오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보험료나 기사 배정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용료를 받으려 한다(카카오모빌리티 프로 서비스). 대리운전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본가들에게 승차 공유 서비스는 돈벌이를 위한 새로운 시장이다.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은 최근에 ‘타다’를 출시했다. 소비자가 스마트 폰으로 배차를 신청하면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임대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승차 공유 서비스 자본가들에게 서울·경기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한국에 2000만 대가 넘는 자동차 중 40퍼센트가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2300만 명이 몰려 산다.

둘째, 그렇다면 카카오 운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득을 볼 수 있을까?

미래의 카카오를 보기 위해 현재의 우버를 보자. 우버는 세계적인 승차 공유 서비스다.

경제 위기로 노동시장이 악화된 나라들에서 우버는 새로운 일자리 대책처럼 여겨졌다. 부수입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우버 운전자로 일했다. 학생들도 학비를 벌기 위해 우버 운전자가 됐다. 심지어 전통적인 택시 기사들도 휴무 시간에 우버를 위해 일했다.

그러나 우버는 운전자들을 피고용인이 아니라 계약자로 간주했다. 이 덕분에 회사는 수당과 보험 등에서 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

대중교통

셋째, 승객의 편익은 개선될까?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택시의 ‘승차 거부’에 불평한다. 또, 교통·수송은 점점 하락하는 임금 때문에 압박받는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지출 부분이다. 대중교통



택시 노동자들은 사용자들과는 독립적으로 조건 개선 투쟁을 해야 한다

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원유 가격이 하락해도 기름값은 계속 인상된다.

그래서 어떤 노동자들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승차 거부를 하는 택시보다 이용이 쉽고, 비용이 저렴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실제 그렇게 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쟁점은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 운영을 담당할 노동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진정으로 혁신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의 수립은 사회의 생산 조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쟁과 연결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카카오 vs 택시’의 갈등은 자본주의적 교통·수송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자본가들은 교통·수송을 그저 이윤 벌이 수단으로만 본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회적 필요라는 점은 그들에게 부차적이다.

요컨대, 자본주의에서 기술 진보의

목표는 승객 서비스나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다. 이윤 추구가 궁극적 목표다. 치명적 이윤 물이 때문에 기술 발전은 종종 고객·노동자의 이해관계와 어긋난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의 기술적 발전은 진보적 측면이 있음에도, 동시에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준다.

자본가들은 기계화·자동화를 도입하면서 이윤을 늘리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내쫓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특정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위협으로 나타난다.

택시 노동자들

택시 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격렬하게 반대한다. 카카오 카풀이 도입되면 택시 승객을 크게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 택시 기사들은 심각한 위험감을 느끼는 것 같다.(법인택시 노동자보다 개인 택시 기사가 2배가량 더 많다.) 승객 기반이 감소하고 택시 시장이 축소되면 개인 택시 면허 프리미엄(권리금) 가치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권리금이 대략

9000만 원 정도다. 이 권리금은 개인 택시 기사들의 노후자금이기도 하다.

택시 자본가들도 택시 시장을 빼앗길까 봐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한다.

그런데 택시 노동조합들도 반대한다. 물론 승객 감소로 말미암아 택시 노동자들은 가뜰이나 적은 수입이 더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택시 기사만이 아니라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택시 노동조합이 사측과 함께 반대 운동을 하고, 심지어 우파 정당인 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참석해 연설하게 한 것은 우려했다. 우익 포퓰리즘이 성장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이 카카오나 택시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 자본가든 택시 사주든 막대한 이득과 사욕을 챙기려 한다. 사실, 이번 전투는 두 진영의 자본가들이 벌이는 전투다.

반면, 택시 노동자들과 카카오 운전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빚을 갚는 등 똑같은 것을 원한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시 노동자들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복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12월 5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제주도 복지국제병원(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두 달 전 속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복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허가한 것이다.

원희룡은 이를 전 이미 개원 허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원희룡은 최종 결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복지국제병원과 토평동, 동흥동 주민들을 만나고 청와대와 정부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 측은 “전국적인 경제침체 상황”,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 고려”, “사실상 정세수준”의 “외국인 투자실적” 등을 운운했다. 두 달 전 “속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던 말을 뒤집는 발언으로 읽힌다. 12월 4일에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내세우는 이런 명분들은 이미 공론조사 과정에서 논박당한 것들이다. ‘조건부’로 외국인에게만 허용한다는 얘기도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이런 조건들에도 다수가 영리병원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공론조사 위원회는 제주

도에 불허 권고를 한 것이다.

두 달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가 확실해졌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두 달 동안 의료기기 및 의약품 안전 규제 완화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며 원격의료도 허용하려 한다.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에 자신감을 얻어 영리병원을 허가한 듯하다. “청와대와 정부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말이 이를 시사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공론조사 기간에도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복지국제병원의 입장을 대리할 정도로 영리병원 설립에 공을 들였다. 공론조사 결과가 허가로 나오면 이를 명분으로 국내 1호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했던 것이다. 문재인은 전에도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명분으로 비교적 반발에 부딪히지 않고 해발전 폐기 공약을 폐기한 바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조치로 기록될 것이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복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발표 직후 제주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개설 철회를 요구했다. 또 제주도지사 원희룡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들과 무상으로 운동본부도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12월 6일에는 윤소하 의원실 주최로 국회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김재현



‘광주형 (저질) 일자리’ 중단하라

박설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에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총리 이낙연은 “노사 상생의 새 모델”이라고 치켜세우며 차질 없는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언론들도 지

방 정부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이 일군 “첫 일자리 정책 성공 사례”라며 기대를 쏟아 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보다 더 나쁜 일자리를 강요하고 있다”고 옳게 비판하며 ‘광주형 일자리 폐기’ 투쟁을 선언했다.

최저임금 수준인 반의 반값 임금

합의문은 주 44시간 노동에 평균 연봉 3500만 원,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단체협약 유예, 직무급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임금은 연봉 3500만 원보다 더 못하다. 매월 16시간 초과근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제하면 연봉은 2000만 원대로 떨어진다. 3500만 원은 관리자들을 포함한 평균치이므로 그 거품도 걷어 내야 한다. 그리고 나면 생산직 노동자들의 연봉은 내년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임금 격차 해소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확대해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조건을 끌어내리려 한다. 경제 위기에서

기업주들의 이윤을 회복하려고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는 것이다.

또, 경영이 안정화 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노동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것이 순전한 위선임을 보여 준다. 저임금에, 노조할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기존의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임금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 설계됐다. 애초부터 임금 하향평준화를 노렸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를 줄이고 “사회 연대”를 이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은 사회악이기는커녕



노사 상생 모델이 아니라 노동자 희생 모델

순기능을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조건을 개선하면 중소·하청 노동자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조건도 동반 상승한다.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투쟁해 성과를 내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자신감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노동운동 내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면서도 반의 반값 임금 문제를 부각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당히 퍼져 있기 때문이다. 연대임금론을 펴 온 현대차지부 하부영 집행부도 그런 경우

다. 울산지역의 정의당·민중당·노동당 등도 광주형 일자리 반대에 임금 문제를 내세우지 말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방어를 부차시한다면 효과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기 어렵다. 임금 삭감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노동자 모두에 해로운

정부와 언론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고용난에 숨통을 트여 주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제시하는 일자리가 왜 고작 저임금·저질 일자리여야 하는가?

정부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기업주·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도 있다. 임금·조건 하락 없는 노동시간 대폭 단축을 추진해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도 있다. 그런데 되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거꾸로만 가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반대는 실업에 내몰린 청년들을 등지는 “귀족노조의 이기심”이 아니다. 저임금 일자리 양산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동운동은 정부가 청년

들에게 저질 일자리나 실업이나 하는 나쁜 선택을 강요하는 데 단호히 반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한편, 광주에 생길 신규 일자리 규모가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설 공장에서 직접 고용하겠다는 인원은 10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 연관 기업들에서 간접적으로 1만 명 이상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고려할 때 이를 보장하기도 어렵다.

국내 경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로인데다 관세 장벽도 높아지고 있어 해외에 내다 팔기도 어렵다. 이런 조건에서 인건비만 줄인다고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도 “과잉 중복 투자”로 인해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한다. 기업주들이 너도나도 생산대수를 늘리며 각축전을 벌이다가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광주가 아니라 울산에 투자하라거나, 광주형 일자리가 아니라 전기차에 투자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자칫 작은 파이를 놓고 노동계급 내부에서 반목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또, 노조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투자 방식이나 산업 정책을 내놓는 데 힘을 쏟다 보면 고용을 위해 임금·조건 등을 희생해야 한다는 압력에 굴복하기 쉽다.

단호하게 투쟁을 확대해야

이번 합의문에는 노사민정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안정적 노사관계를 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그래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 평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사회적 교섭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계급 협조를 끌어내고 노동자 투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대승적으로 양보·협조”하는 구실을 했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됐지만, 아직 사태가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현대·기아차 노동

자들은 생산에 타격을 줘서 사측에 압박을 가하고 정부의 저임금 일자리 양산 정책에 제동을 걸 힘이 있다.

현대차·기아차지부는 12월 6일 2시간 파업을 한다. 그런데 그 이상의 계획은 결정된 게 없다. 현대차지부 확대운영위원회는 “투쟁 방침을 지부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시간을 끌며 투쟁의 감을 빼기보다 파업을 단호하게 확대해 효과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저임금 일자리 양산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만큼,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도 시급히 조직돼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직장 □노조 □대학교 □중고등학교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olidarity.org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wspaper.org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